

# 경제 자료

서울 - 평양 메가시티,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

민경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김슬기



## 서울-평양 메가시티,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

민경태 | 북한미래학자, 『서울 평양 메가시티』 저자 | minkenny@gmail.com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결정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주변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정치 전략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북한과의 협력을 심화하거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주변 국가들이 북한의 경제적 가치를 선점하는 사이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만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이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한국 경제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찾을 수 있다. 그 가능성과 잠재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다.

그런데, 필자는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북한학을 공부한지 9년이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니, 학자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바로 북한 붕괴에 의한 남한 주도의 통일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굶주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서 언젠가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한반도가 통일되는 시나리오를 꿈꿔 왔을 수도 있다. 즉, 한반도의 통일이 북한의 붕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필자의 기고문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메가 수도권을 제안한다," 『민족화해』, 2014년 11-12월호 특집 <남북관계,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다 ①>의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함.

## 북한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기대는 위험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갑작스런 흡수통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한과 북한은 각각 UN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국제법상으로 볼 때, 북한 붕괴 후 한국 주도로 즉각적인 통일과정이 진행되기보다는 북한 지역이 국제관리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 정권의 붕괴와 같은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오히려 한국이 통일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잇따라 발표된 북한 정권 붕괴를 가정한 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2013년 9월에 발표한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정권 붕괴 시 한·미와 중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등 주요시설에 동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2의 휴전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 정권 붕괴 시 탈북자 이탈에 대응하거나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차라리 중국의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것이다. [그림 1]

한편,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친 중국 매체로 알려진 홍콩의 월간잡지 <경보>의 량귀량 부편집장이 2013년 10월 홍콩 유력 일간지 <명보>에 기고한 글에서는, 북한은 어떤 전조 없이도 갑자기 붕괴할 수 있으므로 유사시 중국의 인민해방군 3개 여단의 북한 파병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파병 목적과 대상지역으로 영변 핵시설 장악, 두만강 하구에서 미국과 일본의 잠수함 차단, 신의주에서 대규모 북한 난민의 중국 유입 방지, 전략적 요충지인 황해도 장산곶 점령 등을 언급하며 매우 구체적으로 중국군의 한반도 개입 계획을 언급하였다.

[그림 1] 미국 랜드연구소가 제시한 제2휴전선 모델



자료: "北 붕괴하면 中 개입 요청. 제2휴전선도 필요." 『노컷뉴스』, 2013년 9월 24일.

이와 같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입장에 따라서 한반도가 다시 분할되고 영토적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비록 이러한 주장이 어느 한 연구소의 제안이나 개인의 기고문이라 해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문제들을 모두 극복하고 한국 주도로 통일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런 흡수통일은 남한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극심한 사회 혼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현재의 분단 상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남한의 경제 의존도만 보아도 그러한데, 하물며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보면 동북4성으로 전략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서 혹시라도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남한 주도의 통일이 진행되기 보다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반쪽만을 가진 남한이 동북아의 강대국들 틈에서 생존해 나가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북한이라는 완충 역할이 사라지게 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것이다.

## 점진적인 남북한 경제통합이 가장 효과적

어떠한 통일 방식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할 것인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진행시켜서 점진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갑작스런 흡수통일이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철도·도로 등 동독 지역 인프라 구축에 투자된 비용은 12.5%에 불과한 반면, 복지수준을 일시에 향상시키다 보니 전체 통일비용의 50%가 사회보장성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만약, 남북한의 갑작스런 정치적 통일에 의해 고용시장이 통합되고 복지수준을 동일하게 맞추게 되면, 남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에도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 노동생산성은 정체된 상태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만 상승시키는 것은 북한에 투자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결국은 한반도 전체의 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통일 비용은 북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 일시적으로 북한 주민의 소득보전 정책에 쓰이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남북한 통합 방안은, 국경선이 유지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는 것이다. 정치적 통일은 유보한 채로 경제적 통합을 진행시키면,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양쪽 모두 이익을 보면서 남북한의 격차를 점차 완화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점진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을 과거의 개발도상국 성장모델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보다는,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맞추어 북한의 성장전략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광역경제권 도시들의 발전 모델이 여러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한반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광역경제권을 만들어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무대로 활용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다. 남북한 협력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을 제안한다.

남북한의 체제가 다른 상태에서 이런 구상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는 실제로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홍콩과 광둥성의 여러 도시를 포함하는 주장삼각주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였다. 초기에는 홍콩과 중국의 선전(深圳)특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광둥성의 전체지역으로 협력이 확대되었다. 홍콩 기업들이 중국 생산시설의 임금 경쟁력을 활용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여러 도시가 성장하여 서비스업 위주의 홍콩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그림 2] 한반도 메가수도권의 지경학적 중요성



자료: 민경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성」,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p. 96.

## 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중국의 주장삼각주 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해 보면, 서울과 개성공단의 협력으로 시작된 범위를 확장하여, 인천, 해주, 평양, 남포, 사리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역경제권을 만들고, 이들 도시를 첨단 교통·통신·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서울과 평양의 200km 거리 정도는 한 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마치 하나의 도시와도 같이 기능하는 동일한 경제권으로 발전하게 된다.

남북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은 남한의 발전된 역량에 효과적으로 접속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갖출 수 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의 경제 체제에서는 물질적 생산요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지식기반 경제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의 네트워크 경제 구축이 더욱 타당한 미래 발전 방향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남한은 북한의 강점인 자원과 노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전시켰던 제조업을 다시 한반도로 가져오는 리쇼어링(Re-shoring) 전략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평양 메가 수도권에서의 협력 방식은 새로운 분업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고 서로가 가진 경쟁력이 매우 다르다는 점은, 오히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는 폭발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북한의 강점인 노동·자원 부문에 남한의 R&D·디자인·마케팅 역량을 결합하면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남한은 기존의 강점인 기술·자본 부문을 더욱 확대 발전시킴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신성장산업 분야에서는 북한과 함께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남북한 거점 도시 사이를 첨단 인프라로 연결시키고 남한의 기업이 북한의 우수한 인재 양성에 노력하면, 지식기반 산업을 위해 필요한 남북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서울-평양 메가 수도권에는 정부 기관들과 여러 국제기구의 사무소가 거점 도시들에 분산 배치되는 것도 가능하다. 과거 군사적 긴장과 분단을 상징하던 이 지역이 자유로운 투자와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유라시아 대륙과도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 강점을 살려 물류와 비즈니스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

## 내일 북한에 급변사태가 온다 해도, 오늘 경제협력은 필요하다

이러한 비전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기존의 이익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방적 이익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의 모든 이들이 한반도에 투자하고 그들의 에너지가 서로 교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북한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아울러, 분단 체제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었던 집단이나 국가들이 새로운 이익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은 한반도를 대표하는 이익 공유 시스템이자, 남북한의 협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제 막연히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한반도 통일의 안일한 꿈은 접자. 그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으로도 한국이 통일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방안이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점차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한 주민에게 우호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남북한의 협력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 타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성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남한과 북한이 모두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상생적인 협력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혹시라도 내일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오늘 경제 협력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길만이 한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우리 주도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김슬기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kseulki86@kdi.re.kr

본 자료에서는 2000년부터 현재(2014년 11월 18일 기준)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원 및 투자관련 제반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관련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중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료를 선정하여 이를 다양한 표와 그림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통계항목 및 그것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인도주의적 지원: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의 Financial Tracking System(FTS)
2. 해외직접투자(FDI):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중국 상무부의 「중국상무연감」
3. 공적개발원조(OD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 식량지원: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International Food Aid Information System(INTERFAIS)
5. 한국의 대북지원: 통일부 및 통계청
6. 미국의 대북지원: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명칭은 약어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의 구체적인 설명 및 출처는 각주를 달아 명시하였다.

## I. UNOCHA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통계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의 Financial Tracking System(FTS)은 공여국가 및 기관, UN 기구, OCHA의 현장 사무소, EU 인도지원사무국(ECHO), NGO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를 연도별·공여자별·지원채널별·지원분야별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중 2000년 이후 북한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도주의적 지원만을 추출하여 이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변동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 1. 2000~14년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표 1-1〉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추이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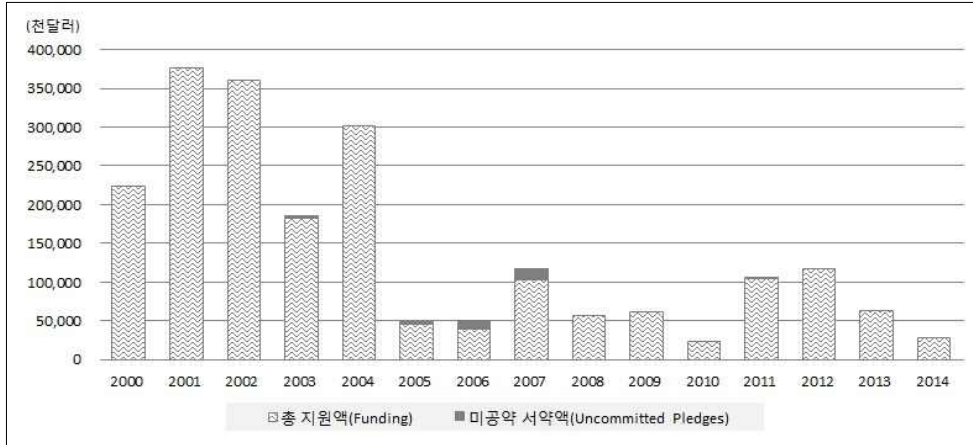
연도	총 지원액(Funding)	미공약 서약액(Uncommitted Pledges)
2000	224,149	-
2001	377,599	-
2002	360,835	-
2003	182,886	3,814
2004	301,784	-
2005	46,168	3,660
2006	40,043	10,496
2007	103,065	13,915
2008	56,697	-
2009	61,330	-
2010	24,492	-
2011	105,314	164
2012	117,793	-
2013	62,797	-
2014	28,348	-
<b>계</b>	<b>2,093,302</b>	<b>32,050</b>

주: 1) 총 지원액(Funding) = 기부액(Contributions) + 지원 공약액(Commitments)

2) 기부액(Contributions)은 실제로 공여자로부터 수혜자에게 전달된 원조 공약액이며 기부 약정액(Commitments)은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에 계약상으로 약속된 원조 공약액을 말함. 서약액(Pledges)은 아무런 계약상의 의무 없이 공여자에 의해서 표명된 원조공여 서약액을 뜻함.

자료: UNOCHA의 Financial Tracking System(FTS) 데이터베이스(<http://fts.unocha.org>, 접속일자: 2014.11.17)

〈그림 1-1〉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추이



자료: UNOCHA의 Financial Tracking System(FTS) 데이터베이스(<http://fts.unocha.org>, 접속일자: 2014.11.17)

## 2. 2000~14년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 공여자(Donor)별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공여국별 대북지원규모는 한국, 미국, 일본 순(총 지원액 기준)이며 2000년에는 이들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도달하였으나 북한의 도발에 따른 제재 등으로 인하여 2013년도에는 20%까지 하락하였다.

〈표 1-2〉 공여자(Donor)별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규모(2000-14년 총 지원액 순)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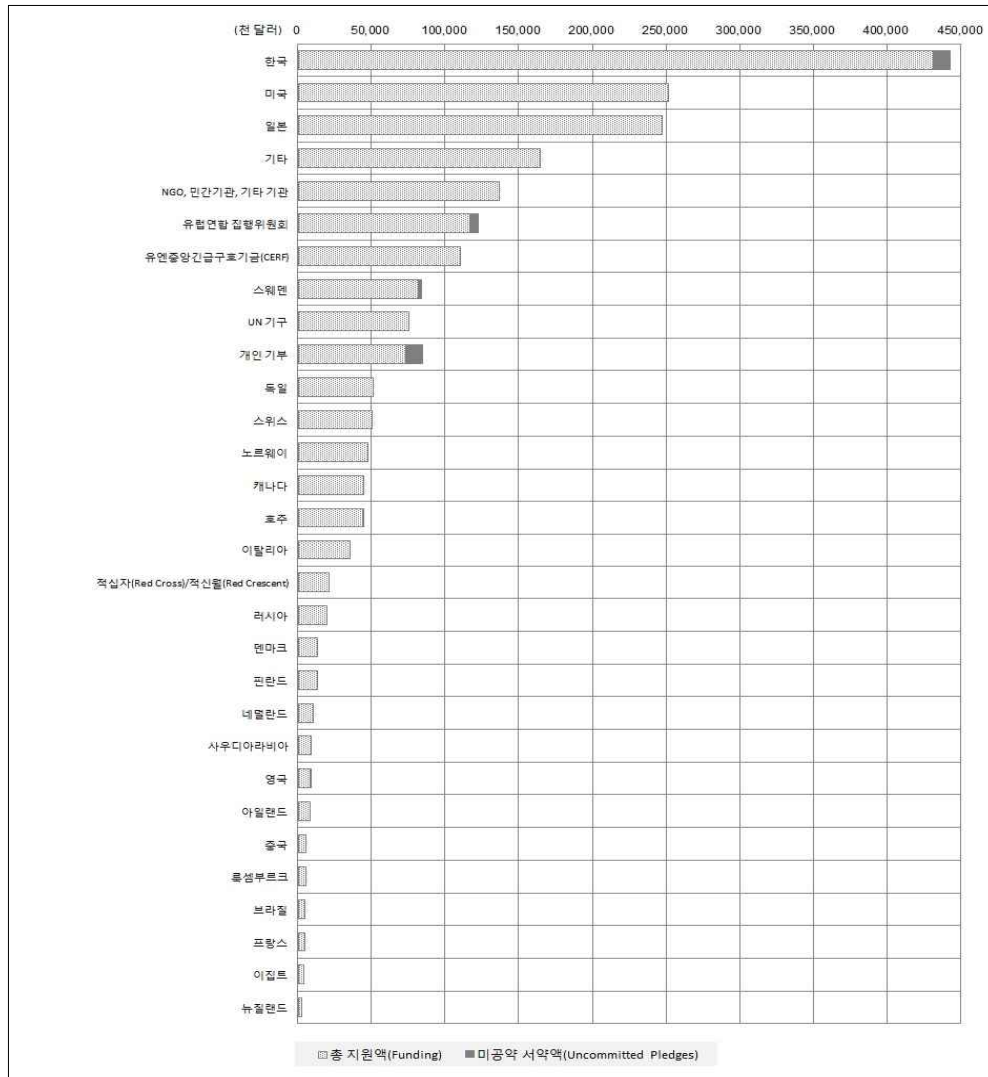
공여자(Donor)	총 지원액(Funding)	미공약 서약액(Uncommitted Pledges)
한국	430,956	11,017
미국	250,941	-
일본	247,247	-
기타	164,370	-
NGO, 민간기관, 기타기관	136,571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116,253	5,819
유엔중앙긴급구조기금(CERF)	110,302	-
스웨덴	81,695	1,860
UN 기구	75,441	-
개인 기부	72,734	11,717
독일	50,926	-
스위스	50,445	-

공여자(Donor)	총 지원액(Funding)	미공약 서약액(Uncommitted Pledges)
노르웨이	47,532	-
캐나다	44,816	-
호주	43,562	615
이탈리아	35,007	-
적십자(Red Cross)/적신월(Red Crescent)	20,684	-
러시아	19,453	-
덴마크	13,456	-
핀란드	12,993	-
네덜란드	10,321	-
사우디아라비아	9,042	-
영국	7,946	609
아일랜드	7,924	-
중국	5,218	-
룩셈부르크	5,161	-
브라질	4,515	-
프랑스	4,493	-
이집트	3,881	-
뉴질랜드	2,372	-
인도네시아	2,000	-
쿠바	1,396	-
인도	1,000	-
OPEC 기금	687	-
오스트리아	435	-
남아프리카공화국	424	-
체코	274	-
리히텐슈타인	273	-
터키	170	-
헝가리	133	-
폴란드	63	164
쿠웨이트	49	250
에스토니아	41	-
그리스	37	-
싱가포르	35	-
아이슬란드	13	-
키프로스	12	-
<b>계</b>	<b>2,093,299</b>	<b>32,051</b>

주: 총 지원액(Funding) = 기부액(Contributions) + 지원 공약액(Commitments)

자료: UNOCHA의 Financial Tracking System(FTS) 데이터베이스(<http://fts.unocha.org>, 접속일자: 2014.11.17)

〈그림 1-2〉 공여자(Donor)별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규모(2000-14년 총 지원액 순, 상위 30개)



자료: UNOCHA의 Financial Tracking System(FTS) 데이터베이스(<http://fts.unocha.org>, 접속일자: 2014.11.17)

〈표 1-3〉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규모 상위 3개국의 합계 및 비중(2000-14년 총 지원액 기준)

(단위: 천달러)

연도	한국	미국	일본	상위 3개국 합계	상위 3개국 비중	국제사회
2000	53,809	29,228	95,657	178,695	(79.7)	224,149
2001	68,721	102,696	104,890	276,306	(73.2)	377,599
2002	82,010	63,490	2	145,502	(40.3)	360,835
2003	16,832	31,518	-	48,350	(26.4)	182,886
2004	117,741	19,308	46,698	183,747	(60.9)	301,784
2005	33	-	-	33	(0.1)	46,168
2006	11,979	-	-	11,979	(29.9)	40,043
2007	23,383	4,100	-	27,483	(26.7)	103,065
2008	15,321	-	-	15,321	(27.)	56,697
2009	14,213	-	-	14,213	(23.2)	61,330
2010	-	600	-	600	(2.4)	24,492
2011	-	-	-	-	-	105,314
2012	8,265	-	-	8,265	(7.0)	117,793
2013	12,083	-	-	12,083	(19.2)	62,797
2014	6,566	-	-	6,566	(23.2)	28,348

### 3. 2000~14년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 분야(Sector)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억달러 정도가 식량부분에 지원되었으며 이는 총 지원액의 5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2005년 이후는 식량, 보건, 농업, 식수 및 위생 분야 외에는 지원 실적이 미미하다.

〈표 1-4〉 분야(Sector)별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규모(2000-14년 총 지원액 순)

(단위: 만달러)

연도	식량	보건	농업	다분야	대피소 및 비식량물품	식수 및 위생	미분류	조정 및 지원서비스	교육	경제회복 및 사회기반시설	지뢰제거	인권	계
금액	107,776	38,338	28,305	21,265	3,567	3,445	2,779	1,476	361	159	159	92	207,722
(%)	(51.9)	(18.5)	(13.6)	(10.2)	(1.7)	(1.7)	(1.3)	(0.7)	(0.2)	(0.1)	(0.1)	(0)	(100)

자료: UNOCHA의 Financial Tracking System(FTS) 데이터베이스(<http://fts.unocha.org>, 접속일자: 2014.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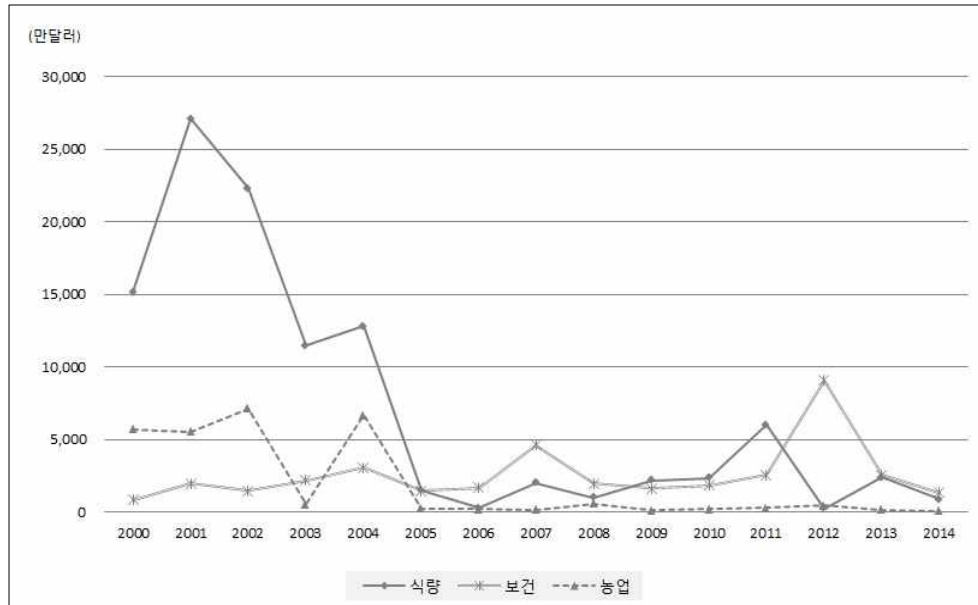
〈표 1-5〉 분야(Sector)별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추이

(단위: 만달러)

연도	식량	보건	농업	다분야	대피소 및 비식량물품	식수 및 위생	미분류	조정 및 지원서비스	교육	경제회복 및 사회기반시설	지뢰제거	인권	계
2000	15,145	828	5,724	129	873	24	-	102	-	-	-	-	22,825
2001	27,075	1,976	5,553	1,575	986	31	-	156	41	-	-	-	37,393
2002	22,283	1,468	7,123	5,466	101	518	-	62	10	-	-	-	37,031
2003	11,445	2,182	540	2,561	519	453	-	23	94	-	-	-	17,817
2004	12,807	3,079	6,696	4,991	722	732	103	153	173	151	-	-	29,607
2005	1,520	1,481	253	784	320	121	47	140	-	-	-	-	4,666
2006	310	1,687	236	1,112	-	439	229	-	-	6	-	-	4,019
2007	2,034	4,628	190	2,872	31	236	174	96	42	-	-	-	10,303
2008	1,023	1,964	573	1,130	-	119	-	-	2	2	-	-	4,813
2009	2,198	1,627	146	644	-	122	-	29	-	-	-	-	4,766
2010	2,353	1,850	234	-	-	33	259	-	-	-	-	-	4,729
2011	6,019	2,566	298	-	-	39	719	53	-	-	159	-	9,853
2012	269	9,068	449	-	16	164	476	333	-	-	-	-	10,775
2013	2,404	2,581	190	-	-	376	435	307	-	-	-	92	6,385
2014	889	1,352	100	-	-	40	337	22	-	-	-	-	2,740
계	107,776	38,338	28,305	21,265	3,567	3,445	2,779	1,476	361	159	159	92	207,722

자료: UNOCHA의 Financial Tracking System(FTS) 데이터베이스(<http://fts.unocha.org>, 접속일자: 2014.11.17)

〈그림 1-3〉 분야(Sector)별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추이(상위 3개 분야)



자료: UNOCHA의 Financial Tracking System(FTS) 데이터베이스(<http://fts.unocha.org>, 접속일자: 2014.11.17)



## II. 대북 해외직접투자(FDI) 통계

UNCTAD는 각 국가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출입 관련 유량(Flow) 및 저량(Stock) 통계를 제공한다. 하지만 각 국가가 어떤 국가로부터 얼마만큼의 투자를 받는지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제공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UNCTAD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FDI 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대 후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1. 2000~14년 국제사회의 대북 해외직접투자(FDI)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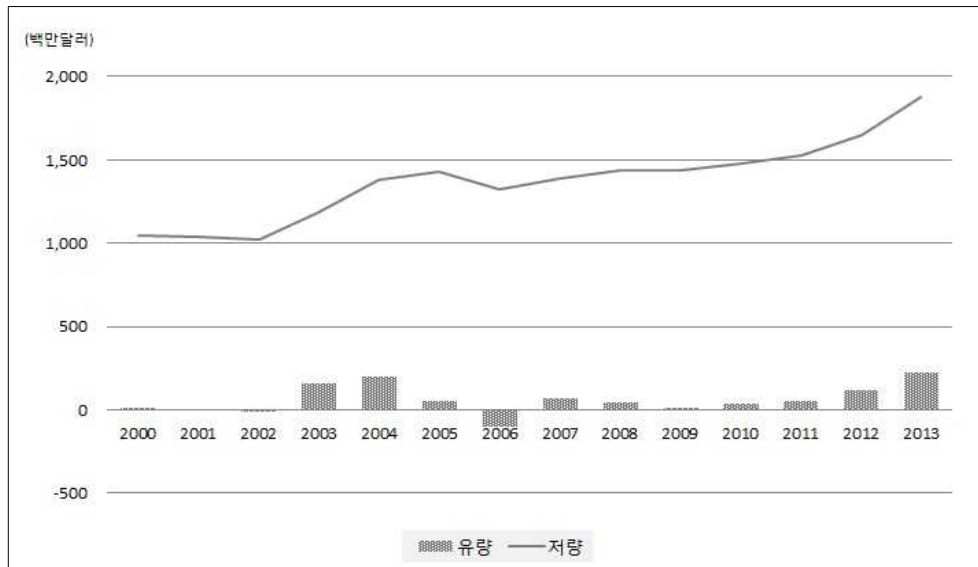
〈표 2-1〉 국제사회의 대북 FDI 추이

(단위: 백만달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저량	1,044	1,040	1,024	1,182	1,379	1,429	1,325	1,391	1,435	1,437	1,475	1,531	1,651	1,878	19,221
유량	3	-4	-16	158	197	50	-105	67	44	2	38	56	120	227	837

자료: UNCTAD의 데이터베이스(<http://unctadstat.unctad.org>, 접속일자: 2014.11.17)

〈그림 2-1〉 국제사회의 대북 FDI 추이



자료: UNCTAD의 데이터베이스(<http://unctadstat.unctad.org>, 접속일자: 2014.11.17)

## 2. 2003~12년 중국의 대북 해외직접투자(FDI)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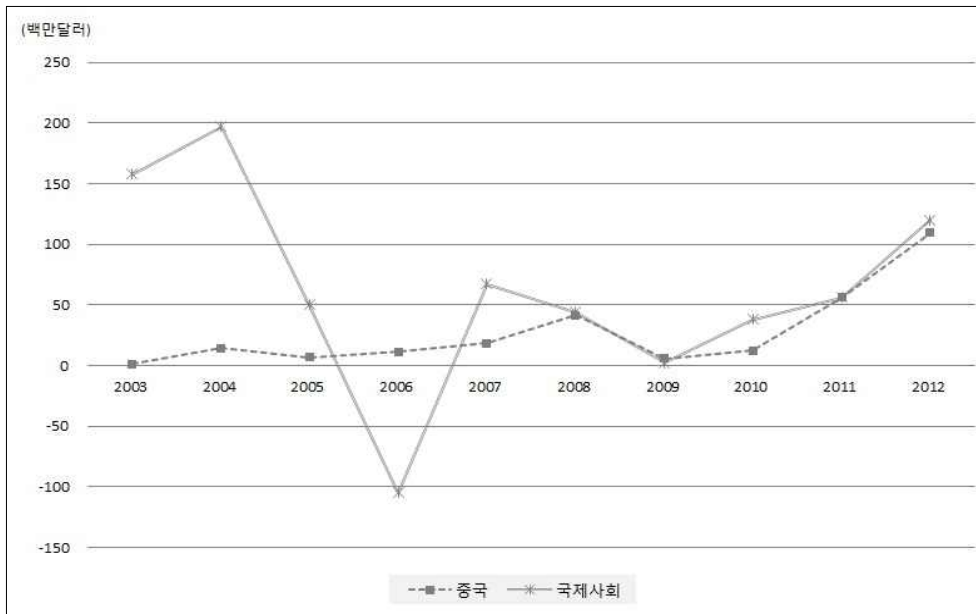
〈표 2-2〉 중국의 대북 FDI 추이(유량 기준)

(단위: 백만달러)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제사회	158	197	50	-105	67	44	2	38	56	120
중국	1.12	14.13	6.5	11.06	18.4	41.23	5.86	12.14	55.95	109.46
(%)	(0.7)	(7.2)	(13.0)	-	(27.5)	(93.7)	-	(31.9)	(99.9)	(91.2)

자료: UNCTAD의 데이터베이스(<http://unctadstat.unctad.org>, 접속일자: 2014.11.17), 중국 상무부의 「중국상무연감」, 2012.

〈그림 2-2〉 중국의 대북 FDI 추이(유량 기준)



자료: 중국 상무부의 「중국상무연감」, 2012.

### III. OECD의 대북 공적개발원조(ODA) 통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에 유입된 자금 흐름관련 통계를 공적개발원조(ODA), 기타공적자금(OOF), 민간 지원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DAC 회원국가나 기관들은 관련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제출한다. 비DAC 국가나 기관의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관련 데이터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 1. 2000~13년 국제사회의 대북 ODA 지원

〈표 3-1〉 주체별 대북 ODA 지원 추이(순 지출액 기준)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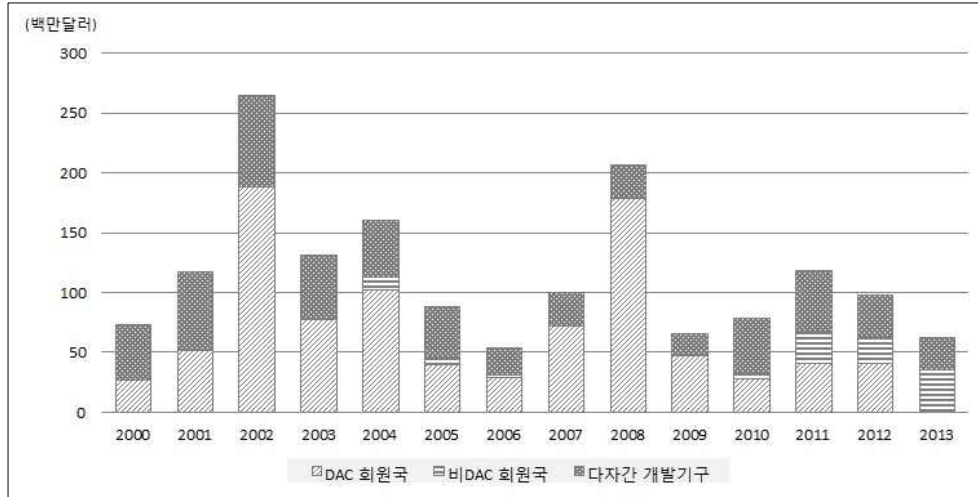
연도	ODA 순 지출액	DAC회원국 (%)	비DAC 회원국 (%)	다자간 개발기구 (%)
2000	73.30	26.92 (37.0)	- -	46.38 (63.0)
2001	117.26	52.28 (44.4)	- -	64.98 (55.6)
2002	264.77	187.85 (70.9)	0.63 (.4)	76.29 (28.7)
2003	130.99	77.96 (59.5)	1.37 (.8)	51.66 (39.7)
2004	161.13	102.38 (63.4)	10.87 (6.8)	47.88 (29.8)
2005	87.56	39.59 (45.5)	5.75 (6.8)	42.22 (47.7)
2006	54.65	28.98 (52.7)	2.21 (3.6)	23.46 (41.8)
2007	99.29	71.96 (72.7)	-0.81 -	28.14 (28.3)
2008	206.19	178.76 (86.9)	-0.77 -	28.2 (13.6)
2009	65.22	46.59 (72.3)	-0.61 -	19.24 (29.2)
2010	78.84	28.01 (35.4)	5.24 (6.3)	45.59 (58.2)
2011	118.58	40.51 (34.5)	27.43 (22.7)	50.64 (42.9)
2012	98.14	40.74 (41.8)	21.31 (21.4)	36.09 (36.7)
2013	61.19	0.56 (1.6)	33.67 (55.7)	26.95 (44.3)
합계	1617.11	923.09 (57.2)	106.29 (6.5)	587.72 (36.3)

주: 1) 개발원조위원회(DAC)는 OECD의 산하기구로서 개발도상국 대상 개발협력에 대하여 전문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주목적. 구성회원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한국, 호주의 28개 국가와 유럽연합(EU)으로 이루어져 있음.

2) 새로 공여 받은 ODA 지원 금액이 상환액보다 적을 경우 음수(-)로 표기.

자료: OECD의 데이터베이스(<http://stats.oecd.org>, 접속일자: 2014.11.18)

〈그림 3-1〉 주체별 대북 ODA 지원 추이(순 지출액 기준)



자료: OECD의 데이터베이스(<http://stats.oecd.org>, 접속일자: 2014.11.18)

〈표 3-2〉 공여자(Donor)별 대북 ODA 지원 규모(2000-13년 순 지출액 순)

(단위: 백만달러)

공여자(Donor)	ODA 순 지출액 (%)	공여자(Donor)	ODA 순 지출액 (%)
미국	436.81 (27.0)	프랑스	7.05 (0.4)
EU 기구	296.40 (18.3)	UNWHO	6.83 (0.4)
독일	103.87 (6.4)	네덜란드	6.81 (0.4)
UNWFP	75.63 (4.7)	덴마크	5.13 (0.3)
스웨덴	71.81 (4.4)	아일랜드	4.85 (0.3)
러시아	71.80 (4.4)	스페인	4.03 (0.2)
스위스	71.37 (4.4)	뉴질랜드	3.48 (0.2)
노르웨이	51.36 (3.2)	폴란드	2.97 (0.2)
Global Fund	51.23 (3.2)	오스트리아	2.70 (0.2)
호주	48.78 (3.0)	GEF	2.66 (0.2)
UNICEF	34.49 (2.1)	벨기에	1.91 (0.1)
쿠웨이트	33.35 (2.1)	체코	1.66 (0.1)
캐나다	32.15 (2.0)	그리스	1.10 (0.1)
OPEC 기금	30.98 (1.9)	터키	0.57 (0)
이탈리아	29.94 (1.9)	UNHCR	0.31 (0)
UNIFAD	22.20 (1.4)	헝가리	0.22 (0)
UNTA	21.52 (1.3)	루마니아	0.22 (0)
UNDP	19.50 (1.2)	한국	0.08 (0)
핀란드	15.15 (0.9)	이스라엘	0.08 (0)
GAVI	13.73 (0.8)	태국	0.05 (0)
UNFPA	12.23 (0.8)	포르투갈	0.01 (0)
영국	11.68 (0.7)	UNAIDS	0.01 (0)
룩셈부르크	8.39 (0.5)	빌 & 메린다 게이츠 재단	0.01 (0)

자료: OECD의 데이터베이스(<http://stats.oecd.org>, 접속일자: 2014.11.18)

## IV. WFP의 대북 식량지원 통계

WFP의 International Food Aid Information System(INTERFAIS)은 식량지원에 대한 통계를 지원유형, 공여자, 수혜자, 식량종류, 전달 방법 등의 변수를 선택하여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추세를 살펴보면 2001년 1백5십만톤 가량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이며 한국, 중국, 미국 세 국가의 식량지원이 전체 대북 식량지원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 1. 2000~12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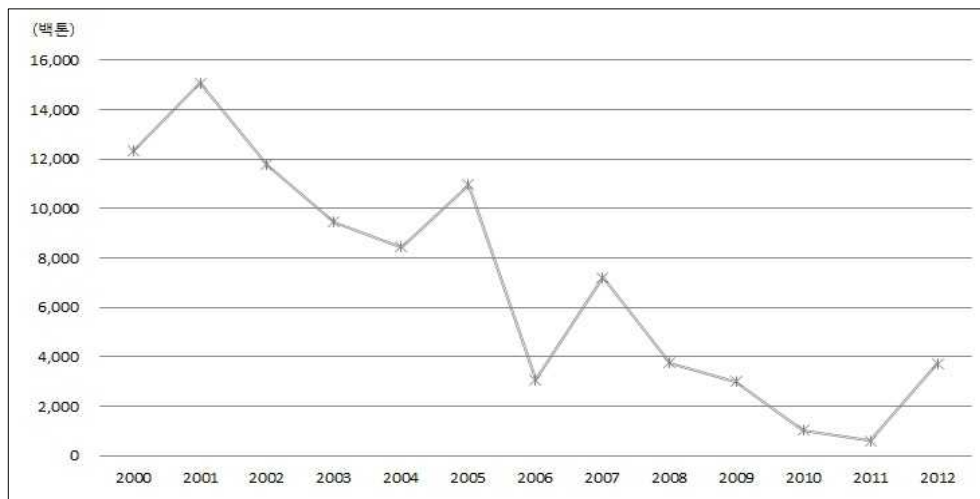
〈표 4-1〉 대북 식량지원 추이

(단위: 백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식량 지원량	12,314	15,080	11,781	9,444	8,448	10,973	3,075	7,205	3,752	3,007	1,042	621	3,726	90,468

자료: WFP의 International Food Aid Information System(INTERFAIS) 데이터베이스(www.wfp.org/fais, 접속일자: 2014.11.18)

〈그림 4-1〉 대북 식량지원 추이



자료: WFP의 International Food Aid Information System(INTERFAIS) 데이터베이스(www.wfp.org/fais, 접속일자: 2014.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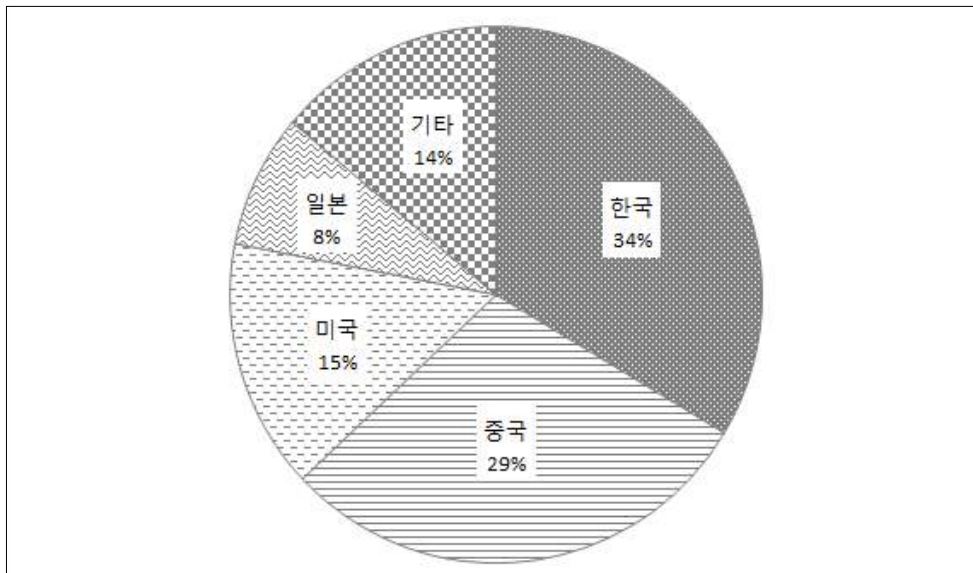
〈표 4-2〉 공여자(Donor)별 대북 식량지원 규모(2000-12년 총 지원량 순)

(단위: 백톤)

공여자	식량지원량 (백톤)	(%)	공여자	식량지원량 (백톤)	(%)
한국	30,406	(33.6)	아일랜드	160	(0.2)
중국	26,561	(29.4)	덴마크	150	(0.2)
미국	13,652	(15.1)	스위스	143	(0.2)
일본	7,289	(8.1)	대만	132	(0.1)
유럽공동체(EC)	1,887	(2.1)	사우디아라비아	103	(0.1)
UN 기구	1,276	(1.4)	룩셈부르크	93	(0.1)
기타	1,247	(1.4)	핀란드	92	(0.1)
호주	1,169	(1.3)	베트남	70	(0.1)
독일	929	(1.0)	인도	53	(0.1)
러시아	906	(1.0)	영국	21	(0)
태국	800	(0.9)	뉴질랜드	18	(0)
스웨덴	792	(0.9)	인도네시아	15	(0)
이탈리아	550	(0.6)	프랑스	14	(0)
캐나다	484	(0.5)	개인 기부	10	(0)
민간 기관	426	(0.5)	오스트리아	8	(0)
네덜란드	393	(0.4)	남아프리카공화국	4	(0)
노르웨이	218	(0.2)	리히텐슈타인	4	(0)
브라질	213	(0.2)	터키	3	(0)
쿠바	175	(0.2)	폴란드	2	(0)

자료: WFP의 International Food Aid Information System(INTERFAIS) 데이터베이스(www.wfp.org/lais, 접속일자: 2014.11.18)

〈그림 4-2〉 상위 4개국의 대북 식량지원 비중(2000-12년 총 지원량 기준)



주: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을 제외한 국가 및 기관의 지원은 기타에 포함.

자료: WFP의 International Food Aid Information System(INTERFAIS) 데이터베이스(www.wfp.org/lais, 접속일자: 2014.11.18)

## V. 한국의 대북지원 통계

통일부에서는 무상지원을 포함한 남북한 간의 교류에 대한 통계를 통일백서나 월간남북교류동향 등의 간행물을 통해서 제공하며, 통계청은 이러한 통계를 북한통계(<http://kosis.kr/bukhan>)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집행된 남북경협기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용자사업과 경상사업의 비중이 전체 집행금액의 50%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1. 2000~14년 한국의 대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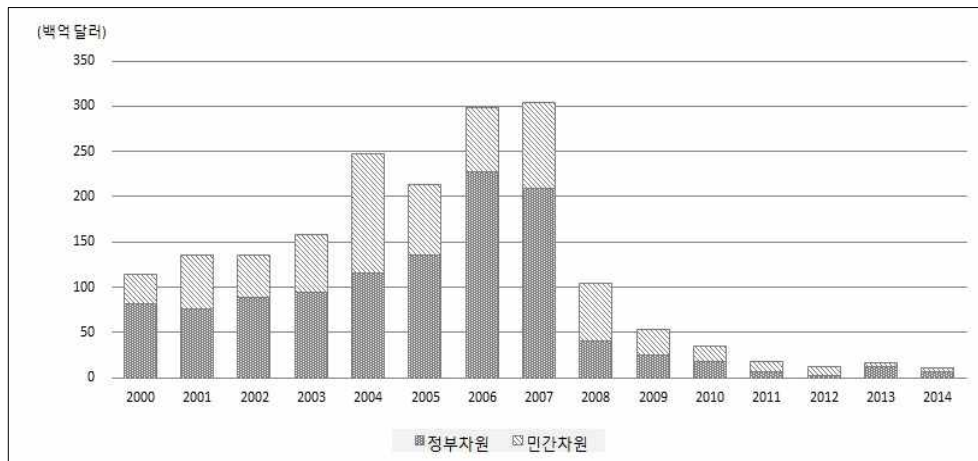
〈표 5-1〉 한국의 대북지원 추이

(단위: 백억달러)

기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부차원	81.4	75.2	89.2	93.8	115.4	135.9	227.4	208.9	40.0	24.2	17.8	5.7	2.1	12.1	6.3
민간차원	32.4	60.2	45.8	63.9	132.5	76.7	70.9	95.7	64.6	28.6	17.5	11.7	10.3	4.5	4.0
계	113.8	135.4	134.9	157.6	247.9	212.5	298.3	304.6	104.6	52.8	35.3	17.4	12.4	16.6	10.3

주: 정부차원 - 기금 집행액 기준(수송비 및 부대경비 포함), 민간차원 - 반출액 기준(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2014년 9월호(제279호).

〈그림 5-1〉 한국의 대북지원 추이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2014년 9월호(제279호).

〈표 5-2〉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물품 및 지원 방식

연도	지원 물품	지원 방식
2000	비료 30만톤	직접지원
2001	내의 150만벌, 옥수수 10만톤, 비료 20만톤, 말라리아 방역지원	직접지원/WFP/WHO경유
2002	옥수수 10만톤, 비료 30만톤, 말라리아 방역	직접지원/WFP/WHO경유
2003	말라리아 방역지원, 취약계층 지원, 비료 30만톤, 옥수수 10만톤	직접지원/WFP/UNICEF경유
2004	의약품, 긴급구호세트, 비료 30만톤, 말라리아 방역지원, 옥수수 10만톤	직접지원/WFP/WHO경유
2005	말라리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비료 35만톤, 수해응급구호, 취약계층	직접지원/WHO/UNICEF경유
2006	비료 35만톤, 수해복구 지원,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지원	직접지원/WHO/UNICEF경유
2007	비료 30만톤, 성홍열, 구제역, 산림병충해 방제품, 수해복구,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식량 지원	직접지원/WHO/WFP/UNICEF경유
2008	말라리아 방제품, 영유아, 의료장비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직접지원/WHO/WFP/UNICEF/MI경유
2009	말라리아 방제품, 영유아 지원, 의료인력 교육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직접지원/WHO/MI/UNICEF 경유
2010	신종플루 지원, 신의주 수해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직접지원
2011	영유아, 의약품지원	UNICEF 경유
2012	백신 및 의료교육	MI 경유
2013	보건 및 영양	UNICEF/WHO 경유
2014	영유아 지원	WHO 경유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2014년 9월호(제279호).

〈표 5-3〉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물품 및 지원 방식

연도	지원 물품	지원 방식
2000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대한적십자사/독자창구
2001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대한적십자사/독자창구
2002	농기계, 의류, 의료장비, 씨감자 등	대한적십자사/독자창구
2003	동내의, 아동복, 밀가루, 향생제 등	대한적십자사/독자창구
2004	농자재, 피복, 감귤, 의료설비 등	대한적십자사/독자창구
2005	밀가루, 의료설비, 농업용 비닐 등	대한적십자사/독자창구
2006	밀가루, 의류, 의료설비, 수해복구 등	대한적십자사/독자창구
2007	의류, 의료설비, 연탄, 농자재, 수해 복구 등	대한적십자사/독자창구
2008	의류, 농자재, 연탄, 양묘장 자재 등	대한적십자사/독자창구
2009	식량, 의약품, 생필품, 연탄 등	독자창구
2010	밀가루, 분유, 옥수수, 의약품, 의류 등	대한적십자사/독자창구
2011	분유, 두유, 의약품, 밀가루, 말라리아 방역용품 등	독자창구
2012	밀가루, 아동복, 의약품, 의료장비 등	독자창구
2013	쇠고기스프, 내복, 의약품, 영양빵 재료 등	독자창구
2014	분유, 의류, 의약품, 의료소모품, 농자재 등	독자창구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2014년 9월호(제279호).



## 2. 2000~12년 한국의 대북지원 - 분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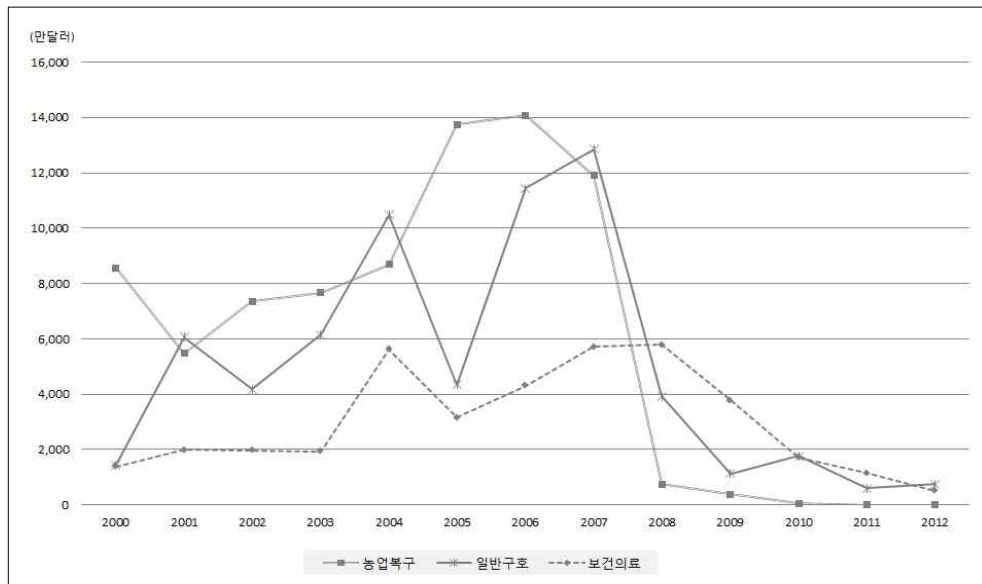
〈표 5-4〉 분야별 대북 무상지원 추이

(단위: 만달러)

연도	농업복구		일반구호		보건의료		계
	금액	(%)	금액	(%)	금액	(%)	
2000	8,562	(75.0)	1,435	(13.0)	1,380	(12.0)	11,377
2001	5,476	(40.0)	6,067	(45.0)	1,996	(15.0)	13,539
2002	7,351	(54.0)	4,174	(31.0)	1,967	(15.0)	13,492
2003	7,673	(49.0)	6,157	(39.0)	1,933	(12.0)	15,763
2004	8,695	(35.0)	10,472	(42.0)	5,624	(23.0)	24,791
2005	13,744	(65.0)	4,346	(20.0)	3,164	(15.0)	21,254
2006	14,081	(47.0)	11,446	(39.0)	4,301	(14.0)	29,828
2007	11,900	(39.0)	12,858	(42.0)	5,703	(19.0)	30,461
2008	743	(7.0)	3,924	(38.0)	5,789	(55.0)	10,456
2009	374	(7.1)	1,131	(21.4)	3,773	(71.5)	5,278
2010	47	(1.3)	1,765	(50.0)	1,716	(48.6)	3,528
2011	-	-	595	(34.3)	1,142	(65.7)	1,738
2012	-	-	742	(59.8)	500	(40.2)	1,241
계	78,646	(43.0)	65,112	(35.6)	38,988	(21.3)	182,746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데이터베이스(<http://kosis.kr/bukhan>, 접속일자: 2014.11.18)

〈그림 5-2〉 분야별 대북 무상지원 추이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데이터베이스(<http://kosis.kr/bukhan>, 접속일자: 2014.11.18)

### 3. 2000~13년 남북경협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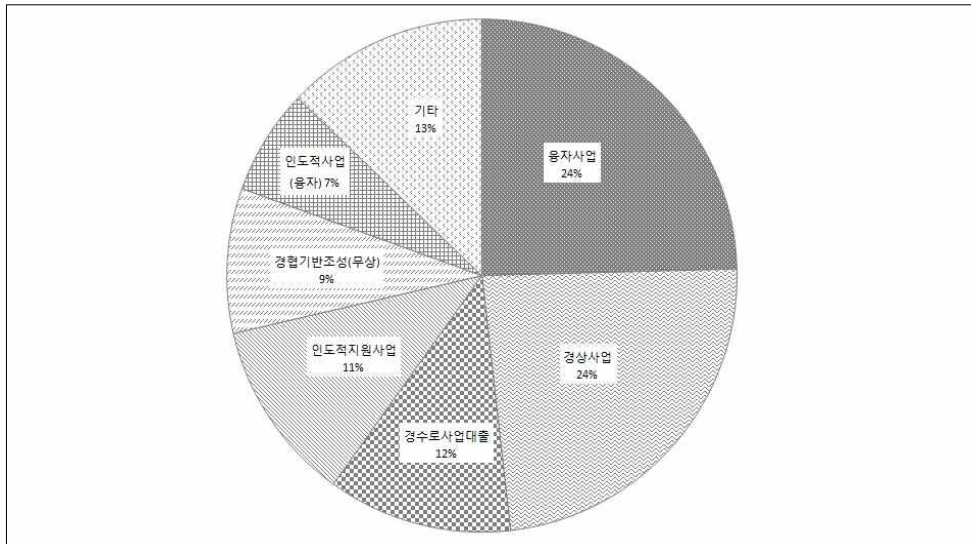
〈표 5-5〉 분야별 남북경협기금 집행 추이

(단위: 억원)

연도	용자 사업	경상 사업	경수로 사업 대출	인도적 지원 사업	경협 기반 조성 (무상)	인도적 사업 (용자)	교역 경험 자금 대출	경협 기반 조성 (유상)	경협 대출	교역 경험 보험	교역 대출	이산 가족 교류 지원	사회 문화 협력 지원	인적 왕래 지원
2000	4,131.8	1,174.7	3,259.4	977.4	145.8	867.4	5.0	-	-	-	5.0	28.3	20.5	2.8
2001	3,653.1	1,891.2	3,002.8	976.1	898.5	189.5	460.7	-	450.0	-	10.7	13.0	1.0	2.5
2002	4,643.7	1,850.9	3,008.8	1,225.8	367.9	967.4	361.6	305.8	357.7	-	3.9	20.3	-	236.9
2003	5,395.1	2,312.4	3,287.5	1,501.3	763.2	1,560.9	187.1	359.7	107.8	-	79.3	30.0	6.5	11.4
2004	2,703.2	2,059.5	869.8	1,225.5	761.0	1,019.8	373.8	439.7	237.0	-	136.8	31.6	31.0	10.6
2005	2,587.7	4,156.4	226.8	1,866.2	2,044.8	1,792.6	293.1	275.2	210.5	-	82.6	132.9	74.7	37.9
2006	838.0	3,872.0	88.8	2,125.4	1,520.9	39.4	479.1	230.7	405.8	-	73.3	99.1	73.8	52.9
2007	2,804.8	4,352.6	-	2,271.9	1,725.4	1,404.8	566.3	833.7	483.4	-	82.9	269.2	69.1	17.0
2008	366.4	1,945.7	-	596.8	1,100.7	0.0	108.1	258.2	29.7	-	78.3	182.4	38.5	27.2
2009	240.1	760.1	-	293.7	414.6	-	154.2	86.0	70.0	-	84.2	21.5	30.3	-
2010	452.7	409.8	-	192.0	176.8	-	415.7	37.0	103.3	-	312.4	19.9	21.2	-
2011	129.8	297.0	-	101.7	124.4	-	74.9	54.9	17.3	43.8	57.6	1.0	25.9	0.3
2012	221.0	472.7	-	23.9	421.1	-	182.8	38.2	34.0	-	148.9	4.4	23.4	-
2013	746.4	2,217.2	-	132.5	266.2	-	555.5	190.9	555.5	1,777.2	-	20.8	20.5	-
계	28,913.8	27,772.2	13,743.9	13,510.2	10,731.3	7,841.8	4,217.9	3,110.0	3,062.0	1,821.0	1,155.9	874.4	436.4	399.5

주: 1990년 남한과 북한의 활발한 교류 및 경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을 제정하고 남북경협기금을 설치함.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데이터베이스(<http://kosis.kr/bukhan>, 접속일자: 2014.11.18)

〈그림 5-3〉 분야별 남북경협기금 집행 비중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데이터베이스(<http://kosis.kr/bukhan>, 접속일자: 2014.11.18)

## VI. 미국경제개발처(USAID)의 미국 대북지원 통계

USAID는 미 의회에 미국이 실시한 해외지원을 보고하기 위해 “U.S. Overseas Loans and Grants (Greenbook)”라는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며 관련 통계를 웹사이트 (<https://eads.usaid.gov/gbk>)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지원은 2008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다.

### 1. 2003~12년 미국의 대북경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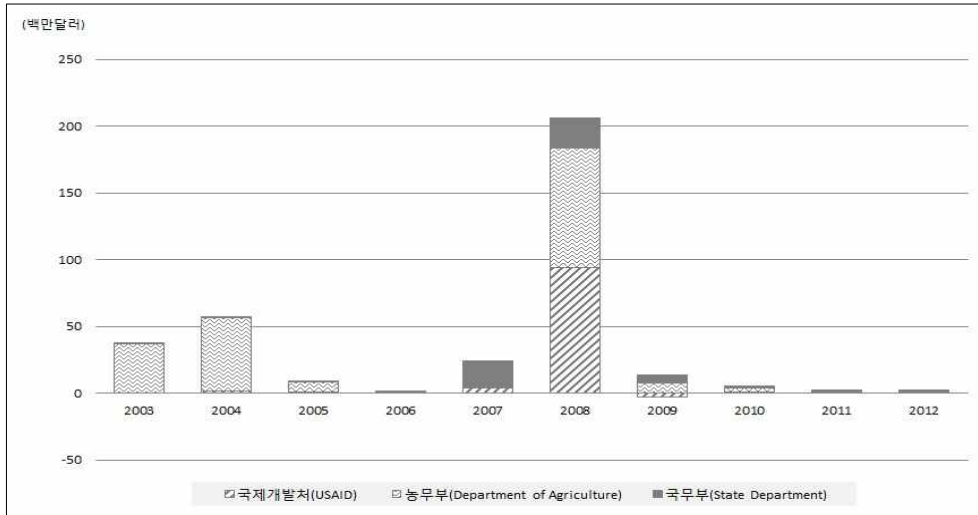
〈표 6-1〉 미국의 대북경제지원 추이

(단위: 백만달러)

연도	총합계	미국경제개발처(USAID)			농무부(Dept. of Agriculture)		국무부(State Dept.)			
		경제지원기금	기타지원	계	식량지원	계	탈북자 지원	핵확산방지, 테러방지, 지뢰제거 등	기타지원	계
2003	36.7	0.3	-	0.3	36.3	36.3	-	-	0.2	0.2
2004	57.3	0.6	0.6	1.2	55.1	55.1	0.9	-	0.2	1.0
2005	8.2	0.8	-	0.8	7.3	7.3	-	-	0.1	0.1
2006	1.2	-	-	-	-	-	-	-	1.2	1.2
2007	23.9	-	4.1	4.1	-	-	-	18	1.8	19.8
2008	206.1	94.0	-	94.0	89.8	89.8	-	19.8	2.5	22.3
2009	10.6	-3.0	-	-3.0	7.7	7.7	-	1.6	4.3	5.9
2010	5.0	-	0.6	0.6	2.9	2.9	-	-	1.5	1.5
2011	2.3	-	0.9	0.9	-	-	-	-	1.4	1.4
2012	2.7	-	-	-	-	-	1.6	-	1.1	2.7
계	354.0	92.7	6.2	98.9	199.1	199.1	2.5	39.4	14.3	56.1

자료: USAID의 Greenbook(<https://eads.usaid.gov/gbk>, 접속일자: 2014.11.18)

〈그림 6-1〉 주체별 미국의 대북경제지원 추이



자료: USAID의 Greenbook(<https://eads.usaid.gov/gbk>, 접속일자: 2014.11.18)